

##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0.18)

### 1.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결정 과정 관련

#### □ [일본 정부 동향]<sup>1)</sup>

-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수출규제 관련하여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었는데 왜 규제 조치를 실시했는지에 대해 보도
- o 6월 20일 아베총리 집무실에서 한국에 대한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2018.10)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일본 기업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을 대응을 요구하였지만 사실상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o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입장을 명확하게 한국 측에 전달할 방법을 찾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
- o (6월 20일부터) 8일 뒤에는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아베 총리는 의장국의 입장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사전에 발표하지 않음.
- o 7월 1일에 규제를 발표한 이유는 G20 후, 그리고 참의원 선거 전에 한국에 대한 강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임.
- \* 한편 일본 아베 정권 간부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지만, 아사히신문은 규제의 영향이 경고에 그치지 않고 한일 관계 악화로 번졌다고 논평
- 또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그때까지의 한일 관계에 대해 쌓여 있었던 일본 측 불만이 계기였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
- o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위기감이 높아져 있었던 상황이었음.

1) 「極秘決定 公表はG20後、参院選前 韓国への輸出規制強化」 『朝日新聞』(2019. 10. 18).

- 2018년 11월 화해치유재단 해산, 12월 초계기 사건 이후 2019년 1월 30일 자민당 본부 내에서는 주한 일본대사의 송환 등에 대한 의견들에 더해 한 의원이 “백색국가 지정을 그만두도록 검토했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함.
- 한편 소관부처인 경제산업성은 규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일본 정부가 이러한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규제 강화를 하도록 촉구
- 자민당의 요청도 있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경제산업성 내부에서는 “규제 후의 영향이 크다” 라는 신중론이 대세였음.
- 하지만 각료들은 “그런 일을 해도 한국은 아프지 않다” 고 하면서, 2019년 5월경 물밑에서 검토하던 다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수출규제강화 등 한국에 보다 엄격한 조치를 하도록 주장하였음.
- \* 규제 강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싸움은 처음이 중요하며, 국내 여론은 이를 뒷받침할 것” 이라는 의견도 제시됨.
- 규제 강화 이후 한일 관계가 안보, 경제분야 악화에까지 이름. 한편 한 일본 정부 고관은 “한일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와 있다” 고 논평
- 아사히신문은 22일에 한국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관계 회복을 위한 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 2. 대통령 친서 관련

### □ [일본 언론 동향]

- 아사히신문은 이낙연 총리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일본을 방문할 것이며, 강제징용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sup>2)</sup>
- 이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외교 당국자간 협의가 계속되고

2) 「文大統領から親書、検討 韓国首相、安部首相と会談へ」 『朝日新聞』(2019. 10. 18).

있으며,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고 발언

- 또한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방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사히신문은 대통령의 친서에 이 취지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함.
- 그에 더해 한국에서 이 총리가 2인자라는 점을 통해 총리의 발언이 문정권의 ‘대일 메시지’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논평함.